

##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한국전력공사가 청도 삼평리 주민 빈기수 외 8인에 대해 제기한 집행문부여 소송을 기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합니다.

북경남 송전선로 공사는 2014년 연말, 사실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미 공사가 끝난 마당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약 2억 2천만 원을 받아내기 위한 집행문을 부여해 달라고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전이 주민과 연대시민들에 대해 분풀이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 소송은 취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앞으로 송전선로 공사와 관련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예방하기 보다, '금전의 압박'이라는 본보기로써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한전의 주장이 어떠하든, 이 공사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적법한 절차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부당한 공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공사를 막을 수 없었던 주민들은, 부득이 맨몸으로 항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 내용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힘 없는 주민과 연대시민들이 취할 수밖에 없었던 미약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전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만한 심각한 행위들이 아닐 뿐더러, 상징적 행위들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더구나 2014년 7월 21일, 한전이 기습적으로 재개한 23호 송전탑 공사 이후, 주민과 연대자들은 참으로 눈물겨운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과 연대시민들이 부상당하고, 실신하여 병원에 실려가고,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주민과 연대시민 등 총 24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감당해야 할 형사상 벌금의 규모는 상당할 것입니다.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으로 상당한 책임과 부담을 안아야 하는 주민과 연대시민들에게, 민사 소송을 통해 이중으로 금전적 압박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연대시민들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자칫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연대와 상호부조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우려마저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약자들을 돕고 자발적으로 연대하는 시민의식이 사라진다면 민주공화국의 근간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삼평리는 이제 상처 입은 공동체를 회복하고, 일상의 삶을 복구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대시민들이 그러한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기꺼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과 연대시민들의 선의의 노력에 재판장님께서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탄원인 :

(서명)

생년월일 :

주소 :